

# 10월 재보선 입지자 벌써 ‘꿈틀’

## 광주 서구청장 보선 4~5명 물밑행보 순천 국회의원 재선거 치러질지 관심

두 달여 남은 10·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아직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없지만, 일부 입지자들은 벌써 물밑 행보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 자치단체장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지역형을 선고받은 전주인 광주 서구청장이 최근 재판부에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10·27 보궐선거가 확실시되고 있다. 전 청장은 내달 선고를 앞두고 이달 말쯤 사퇴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의 행보도 빨라졌다. 현재 민선 3기 서구청장을 무난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종식 전 청장, 광주 북구청장과 민선 1·2기 서구청장을 역임한 이정일 전 청장, 지난 6·2 지방선거 때 서구청

장 선거에 도전해 전 청장에게 패한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 등이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송갑석 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도 가세하고 나섰다. 이들 중 일부는 지역인사와 활발한 접촉을 갖는 등 물밑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28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비 민주당 깃발을 들고 파괴력을 보여줬던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10·27 보궐선거에서도 단일후보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순천이 지역구인 민주당 서갑원 국회의원이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이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이이다. 대법원이 9월 말까지 원심을 확정하면

10·27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지만, 서갑원 의원은 “대법원에서 결백을 밝힐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무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선거를 전제로 자천타천으로 6~7명의 후보가 거명되고 있다. 현재 순천 출신으로 KBS 정치부장과 김대중 대통령 정부수석을 지낸 조순용 유원미디어 대표이사과 장복심 전 국회의원, 박상철 경기대 교수, 구희승 변호사, 이은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지난 6·2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노관규 시장도 강력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시장에 당선된 지 수개월에 밖에 지나지 않은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정가 관계자는 10일 “지난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처럼 서구청장 선거도 민주당 대 비 민주당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행정력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면 고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 日 총리 담화 의미와 내용

## ‘일부 진일보’ 평가속 실질조치 ‘미흡’

### 병합조약 불법성·위안부 문제 등 외면 여전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0일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10일 발표한 담화는 한·일관계의 ‘질곡’인 과거사의 매듭을 풀어보려는 ‘일부 진일보’된 조치로 평가된다. 총론적으로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바탕을 두면서도 병합과정의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간접 시인하고 각론상으로도 구체화된 조치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결을 나아간’ 역사인식과 자세를 대내외에 진지하게 보여줬다는 외교가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무라야마 담화보다 전향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계기점을 맞아 과거사를 ‘매듭’짓고 가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전향적 상황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담화는 여전히 한·일 지식인들이 요구해온 병합조약의 불법성과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고 과거사 갈등의 핵심인 과거 징용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등도 외면했다는 점에서 한계 역시 드러났다. 우선 일본 측이 병합과정의 강제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인하고 있는 대목이 주목된다. 담화문은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

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각론상으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회의 뜻을 표하려는 태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할린 동포지원과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에 이어 조선왕실의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일본측이 이번 담화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준비한 ‘선물’로 보인다. 이는 추후 이행여부에 따라 일본이 수탈해간 문화재 반환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담화는 여전히 강제병합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일본측이 병합과정의 무효를 과감하게 인정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시인한 점이 문제다. 한일 양국 지식인 1000여명은 지난달말 강제병합이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제일교포의 숙원사항인 지방참정권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일왕 방한과 같은 상징적 조치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담화는 결국 일본이 어떻게 후속 대응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한·일관계의 향방에 중요한 방향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일본 정부가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과거사 정리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서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 北 해안포 10여발 남측수역 떨어져

## 백령도 NLL 1~2km 해상에서... 대응사격 안해 논란

북한은 지난 9일 117발의 해안포를 사격했으며 이 중 10여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측 관할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어제 백령도 북방 해상으로 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으며 모두 NLL 남쪽으로 1~2km 지점에 탄착되어 세 차례 경고통신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어제 오후 5시30분부터 33분 사이 해안포를 발사한 이후 추가 사격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측이 세 차례 경고통신을 한 뒤 추가 도발이 없어 대응 사격을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NLL 이남 500여m의 연평도 해상에도 1발이 떨어진 것으로 레이더 관측 결과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연평도 쪽은 영상감시장비로 확인한 결과 해안포가 NLL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측의 해상 합동훈련에 대한 대응조치

일환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어제 오후 8시25분과 8시37분께 북한 연안지역에서 포성이 들렸으며 일부 조명탄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은 NLL 쪽으로 모두 1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군당국이 초병의 육안 관측과 레이더 탐지를 통해 백령도 인근으로 13발을, 연평도 쪽으로는 104발 등 모두 117발을 사격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날 오후 8시가 넘어서는 북측 지역에서 10여발의 포성을 침투했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 1월 북한이 NLL 쪽으로 400여발의 포사격을 가했을 때 NLL 이남으로 포탄이 떨어지면 즉각 대응사격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어제 경고통신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지 말고 즉각 도발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통신을 했고 북측의 추가 도발 상황이 없어 대응사격을 하지 않고 즉응태세를 유지하며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북 “진짜 전쟁맛 보여줄 것”

군 당국이 북한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안포 사격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도발적인 언행이 계속된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내용의 대북 전통문을 10일 발송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끝난 우리 군의 서해 기동훈련을 비난하면서 “필요한 일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으로 진짜 전쟁맛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원칙이나 - 국민 통합이나

### 이대통령 ‘8·15특사’ 막판 고민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국민 통합을 위한 대규모 사면 요구가 있지만 ‘친서민’을 후반기 최우선 국정기조로 잡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재계 고위층에 선뜻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초 사면안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미 노건평 씨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

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차장 등에 대한 사면 건의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인과 기업인 사면에 대해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대체로 부정적인 상황이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정·재계 인사들을 사면할 경우 친서민 정책이 초반부터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정치인 및 기업인 사면에서도 국민 통합 등 긍정적 효과보다는 여론의 못매를 맞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컸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주 한나라당 지도부와 의 만찬에서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 건의를 받고 “정치적 사면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사면 대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정도만 긍정적인 상황이며 나머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형이 확정되고 추징금을 완납한 인물’이라는 사면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정치인과 기업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후반기 국정기조에 맞게 ‘친서민 사면’을 한다는 원칙도 확정돼 생계형 경제사면, 경범죄사, 저소득층 등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아버님, 사랑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기쁨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국산정밀명맥**이 답입니다.

국산정밀명맥은 아버지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국산정밀명맥**을 선물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국산정밀명맥**

국산정밀명맥은 아버지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국산정밀명맥**을 선물하세요.